

민주연구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쟁점과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재영 원장)은 4월 2일(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쟁점과 정책적 함의 - RE100 이행과 공급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력망·입지 제약 해소』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이자, 지방과 기업에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브리핑은 특별법의 정책적 의의를 짚고, RE100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첫째,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시간대별 전력 사용과 재생에너지 인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 둘째, 산업단지를 기업 단위 RE100 이행과 탄소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해, 전력 사용·조달과 탄소배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셋째, 전력비용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 PPA, 망요금 지원, 가격 변동 리스크 완화 등 지원을 병행해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 배지영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핑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RE100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추가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 했다고 덧붙였다. /끝/